

2023년 ESG 10대 트렌드 전망

유현주 수석연구원, ESG경영연구실(yuhyunju@posri.re.kr)

목차

1. 들어가며
2. 글로벌 ESG 공시 표준화 대비
3. 공급망 ESG 리스크 대비
4. 비즈니스의 친환경 수준 식별
5. ESG 관련 분쟁 경계
6. ESG Washing 모니터링 강화
7. 이사회실의 실질적 역할과 책임 강조
8. ESG 혁신을 통한 기업의 실익 추구
9. 기후변화 Loss & Damage 주목
10. Next Carbon 이슈 제기
11. 'Social'의 중요성 부상
12. 종합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23년에는 정부와 투자자를 중심으로 ESG 관련 규제가 가속됨에 따라 기업의 ESG 수준에 대한 객관적 식별 및 평가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ESG 공시 표준화 대비) ESG 이행 체계 마련 과정과 적용 로직에 대한 관리, Peer Group 수준을 감안한 상대적 성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공급망 ESG 리스크 대비) 협력사 특성과 관계별 ESG 리스크 노출도에 대한 관리와 상품 쏠 생애 주기 지속가능성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됨
 - (비즈니스의 친환경 수준 식별) EU 탄소노미 공시 본격화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와 ESG의 통합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됨
 - (ESG 관련 분쟁 경계) ESG 관련 소송에 대한 Litigation Funding Firm의 참여 증가, ESG에 우호적인 법원 선례 축적 등 원고에 유리한 ESG 분쟁 환경이 형성됨
- 또한, 실질적 ESG 성과 창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ESG의 내실 확보가 비즈니스 경쟁력으로 주목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 (ESG Washing 모니터링 강화) '에너지' 중심에서 '소비 행동 관련 정보'로 그린워싱의 적용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ESG 워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이사회의 실질적 역할과 책임 강조) ESG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모니터링이 증가함에 따라 이사회의 실질적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는 추세임
 - (ESG 혁신을 통한 기업의 실익 추구) ESG 기반 기술 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ESG 기반 기술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부각되고 있음
- ESG 관리 영역도 탄소 중심의 접근에서 Next Carbon 이슈, 소셜 이슈, 물리적 리스크 대응 등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
 - (기후변화 Loss & Damage 주목)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기업의 물리적 리스크 대응을 위한 기업 자산 및 사업장 대비책 마련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 (Next Carbon 이슈 제기) 생물다양성 리스크에 대한 사업적 대응과 적응, Water Risk 관리 등 탄소 외 환경 이슈가 부상하고 있음
 - ('Social'의 중요성 부상) 환경 영역 주도의 책임 투자가 사회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비즈니스 연계 소셜 이슈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음
- '23년은 ESG의 변곡점으로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바, 기업은 단기적인 점수가 아닌 장기적인 실력을 쌓는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1. 들어가며

□ '22년에는 석탄발전 및 관련 투자의 재개, ESG평가(사)에 대한 불신 등 Anti-ESG 움직임이 일부 국가와 여론에서 관찰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22년 세계 석탄 소비량은 9년 만에 사상 최고치 수준(약 80억 톤)을 기록했으며, 탈석탄에 앞장 섰던 독일 등 EU 주요 국가들이 석탄발전 재개 계획을 발표함
- 또한 기후변화 대응 관련 ESG의 실효성 부족, ESG평가의 일관성/신뢰성 부족, ESG성과와 재무성과 간의 연관성 부족 등 ESG 비판론이 이코노미스트, 맥킨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기됨

□ 그러나 주요 국가들의 ESG 규제화와 투자자·산업계 주도의 ESG 이니셔티브 성장은 지속되고 있어 ESG의 추진력에 큰 이변은 없는 상황임

-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은 예정대로 글로벌 ESG 정보 공시 의무화 및 표준화를 추진해가고 있음
- 기후변화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인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서포터즈 가입 기관은 '22년 3,960개로 '18년 이후 약 60%대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자 연합체인 'Climate Action 100+'와 산업계 주도의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RE100'의 경우, 아직 '22년 실적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21년까지 참여 규모와 달성 실적 모두 우상향 추세를 보임

□ 이에, 최근 ESG 동향을 기반으로 '23년 ESG 트렌드를 10가지로 구분해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ESG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글로벌 ESG 공시 표준화 대비

[과정과 적용 로직에 대한 관리 요구 강화]

- '23년 내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 기준은 구체적인 대응 전략 및 프로세스, 실질적 이행 체계와 수립 근거 등 과정과 적용 로직에 대한 관리를 요구함
 - (지배구조) 기후 리스크와 기회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책임 조직과 책임자, 해당 역량 공시 요구
 - 책임 조직이 이사회 의무나 관련 정책과 연계된 방식, 리스크와 기회 관리에 적용되는 통제 절차 등
 - (전략) 기업의 직·간접적 대응 방식 관련 전략과 수립 근거 공시 요구
 -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ex. 전략 및 자원 배분, 수요/공급의 변화 등)
 -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의 적응 및 완화 관련 직접적 대응(ex. 생산 공정 변경, 인력 조정, 사용 자재/제품 사양 변경 등)과 간접적 대응(ex. 고객/공급망과의 협력 등)
 - 기후 관련 목표 검토 과정, 기업의 회복력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이행 프로세스와 근거
 - (리스크 관리) 기후 관련 기회에 대한 공시 요구
 - 기후 관련 기회 식별 및 우선순위화 과정, 리스크 식별에 적용된 세부 정보와 데이터 출처 등
 - (지표와 목표) 관리 목표와 진척도 공시 요구
 - 최근 국제적 합의 대비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수준, 제3자 검증 여부, 중간 목표 등
- 향후 발표될 ISSB의 주제별 공시 기준 역시 같은 맥락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자원, 생물다양성 등 주요 ESG 이슈 관리 시에도 이행 과정과 적용 로직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Peer Group 수준을 감안한 상대적 성과 관리 필요]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산업별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인 SASB* 기준을 이미 적용하였으며,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의 기준도 향후 발표된 공시 표준에 반영될 것으로 보임
 - ISSB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비재무 정보 공시 이니셔티브인 GRI와 '22.3. MOU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함
 - GRI는 '21년부터 보편적 표준(Universal Standards)과 별도로 40개 산업 부문별 표준(Sector Standards)을 순차적으로 제정해오고 있으며, 석유 및 가스, 석탄, 농업/수산양식업/어업 부문에 대한 표준을 '22년에 발표함
- * 미국의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로 '18년 77개 산업별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인 SASB Standards 발표
- 산업별 특수성이 반영된 ESG 공시 표준화는 동종 업계 내 ESG 수준에 대한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키므로 Peer Group의 수준을 감안한 ESG 성과 관리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됨

3. 공급망 ESG 리스크 대비

[협력사의 특성과 관계별 ESG 리스크 노출도 관리 필요]

- EU 집행위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 최종 채택될 경우, 광범위한 관리 대상군 중 ESG 고위험 협력사를 선별하는 것이 관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본 지침은 인권과 환경에 대한 공급망 실사 의무화 지침으로 '확립된 비즈니스 관계(established business relationship)**'에 적용되므로 그 적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
 - 기업의 인권 및 환경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협력사와의 실사 준수 계약 체결 및 이행 확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협력사로 인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음

- * 기업 자체, 자회사, 직·간접 공급자, 하도급자 등 해당 기업과 일정 기간 지속이 예상되는 유의미한 직·간접적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공급자 대상으로 기업은 매년 공급망 내 업체의 '확립된 비즈니스 관계' 해당 여부 검토 필요

□ ESG 고위험 협력사 선별을 위해서는 기존의 품질/비용/납기(QCD) 중심의 관리나 환경/보건/안전(EHS) 등 특정 이슈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협력사의 특성과 관계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는 ESG 리스크 노출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협력사가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의 유형에 따른 협력사의 중대 이슈 및 가중치의 차이, 자사와 협력사 간 사업 연관성/거래 지속 기간/거래 비중에 따른 리스크 수준의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함

[상품 쉐 생애 주기 지속가능성 추적 시대의 도래]

□ EU는 모든 물리적 제품에 '디지털 상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제도를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새로운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regulation)' 초안을 '22.3.30. 발표함

- 디지털 상품 여권 제도는 일반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에 상품 쉐 생애주기의 지속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품마다 에코디자인 관련 정보를 전자표식에 담는 제도임
- 본 규정에는 에너지 효율성뿐만 아니라, 내구성, 재활용 가능성, 수리 가능성, 재활용 원재료 비율, 환경 발자국 등 제품 쉐 생애 주기 관점의 기준이 추가됨
- '23년 최종 채택 시, EU는 품목별 규제 사항을 발표할 예정임

□ EU 의회와 이사회는 같은 맥락에서 배터리의 안전성과 책임 있는 재활용 보장을 목적으로 '22.12.9. 지속가능한 배터리 규정(안)에 잠정 합의함

- '23년 내 본 규정(안)이 최종 채택될 경우, '26년부터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음
- 배터리 여권은 용량 2kWh 이상인 모든 산업용, 자동차용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료 원산지, 탄소 발자국,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배터리 내구성 등을 개방형 전자 시스템에 기록한 것임

4. 비즈니스의 친환경 수준 식별

[택소노미 공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와 ESG의 통합 촉진]

□ '23년부터 EU 택소노미에 따른 공시 의무화가 본격화되므로, 기업별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친환경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정의와 기준에 대한 규정으로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됨
- 시가총액 2천만 유로 이상 혹은 순수익 4천만 유로 이상인 EU 역내 상장 기업 중 직원이 500명 이상인 기업은 기술적 선별 기준(TSC)*에 부합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액, 자본 지출(Capex), 운영 경비(Opex) 별 비율을 공시해야 함

* 녹색 활동이나 전환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세부 기술 기준

□ EU 택소노미는 EU 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나, EU 진출 외국 법인과 거래 관계가 있는 한국 기업도 관련 정보를 요구받을 수 있음

□ EU 택소노미의 큰 틀을 그대로 적용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경우,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최근 금융권에서 택소노미 실무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어 국내 택소노미의 활성화에 추진력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됨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실무진이 투자 대상 사업이 택소노미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 택소노미 금융권 적용 시스템 개발'을 위해 10개 금융회사와 업무 협약식을 '22.12.20. 체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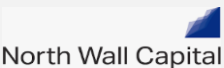
5. ESG 관련 분쟁 경계

[원고에게 유리한 ESG 분쟁 환경 형성]

□ 최근 ESG 관련 소송은 글로벌 소송/분쟁 해결 전문 투자사(Litigation Funding Firm, LFF)의 적극적인 참여로 NGO 및 시민의 전략적 소송에 힘이 실리고 있는 추세임

- LFF는 대규모의 배상금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소송 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자금력이 부족한 원고에게 투자, 승소 시 배상금에서 약정한 금액을 회수하여 수익을 올림

[표1. ESG 분쟁 사건에 투자하는 Litigation Funder]

회사명	ESG 분쟁 사건 투자
 OMNI BRIDGEW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캐나다, 유럽, 호주 등에서 \$20억 상당의 펀드 운용 ○ ESG 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투자가 총 투자액의 약 20%에 달함
 THERI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미국, 호주 등에서 약 \$10억 상당의 투자금 운용 ○ 최근 기후변화에 이어 생물다양성 관련 ESG 소송 증가 예상
 WOODSFO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 항공우주/방위사업체인 Airbus의 뇌물 및 부패 사안에 투자
 LITIGATION LEN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호주 근로자들의 집단 임금 청구 소송에 투자하여 \$190백만 규모의 화해안 도출(호주 사상 최대 금액의 인권 소송)
 North Wall Capi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소송 전문 로펌인 PGMBM과 파트너십 체결, GBP 150백만 규모의 투자 실행

*출처: ESG 분쟁의 양상 및 리스크 관리('22.11.7) 발표 자료, 대한상의-김&장 공동 세미나

□ 최근 ESG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ESG에 우호적인 법원의 선례도 함께 축적되고 있어 향후 유사한 판결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짐

(Case1: 네덜란드 법원, Shell의 탄소배출 저감 의무 인정)

- '19년 환경단체와 네덜란드 시민 1만7000여 명이 Shell의 GHG 배출 저감 의무 위반을 주장한 소송에 대해, '21.5. 네덜란드 법원이 'Duty of Care*' 조항을 근거로 Shell의 의무 위반을 인정함
- 법원은 Shell에 '30년 말까지 글로벌 탄소 배출량을 '19년 대비 45% 저감하도록 명령함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조항임

(Case2: 구글, 직원의 이전 회사 급여 차별 未정정·계약 체결로 소송당해)

- 구글 전직 여성 임원 3명이 임금 성차별로 구글에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이전 근무 회사에서 부당한 급여 차별이 있었으나 구글이 이를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여 계약한 것이 임금 성차별로 이슈화, '22.6.11. 합의안이 도출됨

(Case3: 메타, 소액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으로 소송당해)

- 분산투자를 하는 소액주주의 경우, 자사 수익만 높은 것보다 시장 전체의 실적이 좋은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함
- 소액주주인 원고는 메타가 지배주주를 위해 자사 수익만을 극대화하는 경영전략을 추구하여 시장에 부정적 외부 효과를 일으킴으로써 약 28%에 해당하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22.10.3.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에 소를 제기함

6. ESG Washing 모니터링 강화

['에너지' 중심에서 '소비 행동 관련 정보'로 그린워싱 적용 범위 확장될 것]

□ EU집행위(EC)는 '소비자 권리 지침'에 친환경성 측면에서 제품의 내구성과 수리 및 업데이트 정보를 추가하는 EU소비자보호법(EU consumer rules) 일부 개정안을 '22.3.30. 발의함

- 이는 생산된 제품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무분별한 소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친환경성에 대한 접근을 기존의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효율성 제고' 중심에서 '소비 행동 교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확장한 조치임
- 본 개정안이 '23년에 최종 통과될 경우,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되며, 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집단적 구제 절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EU집행위는 불공정관행지침(UCPD)에도 내구성 및 수리 가능성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제안한 바, 향후 그린워싱의 적용 범위가

같은 맥락에서 확장될 것으로 보임

- 이로 인해, 부당한 상업적 관행으로 추가된 다섯 가지 관행은 하기와 같음
 - 내구성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기능(ex. 특정 기간 경과 후 제품 기능을 중지하거나 다운그레이드하는 S/W)에 대한 미공시
 - 성과를 입증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모호한 주장(ex. 친환경, 에코, 그린)
 - 환경성이 제품의 특정 측면에 국한되어 있으나 제품 전체에 대해 환경성 주장
 - 제3자 검증 체계를 기반으로 하지 않거나 공공기관에서 설정하지 않은 자체 지속가능성 라벨 표시
 - 생산자가 제공하지 않은 소모품, 예비품, 부속품을 사용할 경우 상품 기능이 제한됨을 미공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논의 확산될 것]

- 영국 경쟁시장국(CMA)은 '그린 클레임 코드'에 기반한 그린워싱 사례 조사 및 적발을 '23-24년 집중 영역으로 선정한 바, 구체적인 사례에 기반한 그린워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그린 클레임 코드'는 '21.9.30. 발표된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 시행 지침임
- 친환경 주장의 6대 원칙은 ①진실하고 명확할 것, ②분명하고 명확할 것, ③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숨기지 말 것, ④비교는 공정하고 의미 있을 것, ⑤제품/서비스의 전체 생애 주기를 고려할 것, ⑥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될 것임
- CMA는 '22.8. 영국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의 그린워싱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타 산업군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임

[Saying과 Doing 간 디커플링과 Saying과 Saying 간 디커플링 모두 중요]

- 김&장 ESG경영연구소는 ESG 전략(Saying)과 성과(Doing) 간 디커플링뿐만 아니라 ESG 전략(Saying)과 소통(Saying) 간 디커플링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함
- ESG 전략(Saying)과 성과(Doing)의 디커플링은 하기와 같은 네 가지 사례를 말함

- (Approach) ESG를 주장하나, 주요 경영전략에 ESG가 미포함
 - (Business Model) ESG가 경영전략에 포함됐으나, 사업 모델이 없어 ESG와 수익 간 연결고리 부재
 - (Compensation) ESG를 평가/보상 체계에 반영한다고 하나, 임원 보상 체계에는 미반영
 - (Disclose) ESG 정보를 공개하나, 의도적 누락이 있거나 투명성 부족
- ESG 전략(Saying)과 소통(Saying) 간 디커플링은 대부분 기업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으로 국내외 ESG 워싱에 대한 규제와 사례를 지속적으로 숙지하여 예방해야 함
- ESG 워싱에는 그린워싱뿐만 아니라, 인권 등 사회적 성과를 워싱하는 ‘블루워싱’, 사회적 가치나 효과를 부풀려 소통하는 ‘임팩트워싱’, 지속적 성과 경신에 대한 압박을 피하고자 실제 실적보다 성과를 축소하여 소통하는 ‘브라운워싱’이 있음

7. 이사회실의 실질적 역할과 책임 강조

[ESG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관심 증가]

- ESG위원회의 설립을 넘어 ESG위원회 역할의 실효성에 대한 최근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모니터링이 증가함에 따라 형식적인 이사회 운영의 경우 ESG 워싱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음
 - 경제개혁연구소가 '22.10.28. 발표한 ‘유가증권 상장회사 ESG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21년부터 이사회 내 ESG위원회 설치가 폭증했으나 최근 18개월간 회의 개최 수는 평균 2회 미만, 총 안건의 약 15%만이 환경사회적 이슈와 직결된 의결 사항인 것으로 나타남
 - ESG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김앤장 ESG경영연구소('22.1.), 서스틴베스트('22.6.), 전국경제인연합회('22.9.) 등 다양한 주체를 통해서 지속 제기됨
- 공시 정보를 통한 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를 단순히 보고를 받는 수준으로 활용하거나, EHS(환경/보건/안전) 등 기존

안건을 ESG로 재분류하는 것을 지양해야 함

- 이해관계자가 기대하는 ESG위원회의 역할은 회사의 ESG 전략 방향 수립, 평가 및 보상 체계 내 ESG 반영, 사업/투자 의사 결정 시 ESG 반영 등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한 의결임

8. ESG 혁신을 통한 기업의 실익 추구

[ESG 기반 기술 기업 증가와 관심 부각]

- 맥킨지 코리아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기후 관련 유니콘 기업 수는 타 부문 대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글로벌 기후테크 벤처의 펀딩액도 지속 증가하고 있음
 - '15-21년 기후 관련 유니콘 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63%로 기타 부문 대비 46%p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중국이 기후 관련 유니콘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글로벌 기후테크 벤처 펀딩액도 \$149억('19년), \$226억('20년), \$370억('21년)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음
- 기후 테크 관련 5대 분야인 탄소, 에너지, 식음료, 산업, 모빌리티 중 에너지와 식음료 부문이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탄소가 연평균 성장률 측면에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16-21년 기후 테크 분야별 연평균 성장률은 탄소(78%), 식음료(17%), 산업(14%), 에너지(6%), 모빌리티(2%) 순임

[ESG 기반 기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의 실체로 부각]

- '21년부터 글로벌 투자 업계 리더들은 ESG 기반 기술과 제품을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조명함
 - 영국계 다국적 자산운용사인 Schrodgers의 CEO 피터 해리슨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어인 'NextRise2021'에서 지속가능성의 해답은 ESG 기반 혁신 기술에 있다고 주장함

-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는 '중동 그린 이니셔티브 서밋 2021'에서 차세대 1000개의 유니콘은 검색 엔진이나 미디어 기업이 아닌, 그린 수소와 농업, 그린 스틸과 시멘트를 개발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힘

□ '22년에는 ESG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지닌 구체적인 기업 사례들이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음

- 효소 및 촉매를 제조 공정에 활용하여 친환경적으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Solugen, 대체육을 만드는 Impossible Foods, 전기 트럭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Aurora, 채소류 유통기한을 늘려주는 Apeel Sciences, 대기에서 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DAC 기술 상용화에 주력하는 Carbon Engineering이 그 대표적인 사례임
- 특히, 친환경 화학 기업 Solugen은 美 경제 전문지인 Fast Company가 선정한 '2022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50대 기업' 중 2위를 차지했으며, 창업 5년 만에 기업 가치 2조원 이상, 마진율 60% 이상('22년 기준)을 달성하며 화학 업계의 테슬라로 주목받고 있음

□ 최근 ESG 기술 및 혁신을 주제로 한 글로벌 행사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성장 모멘텀의 구체적인 실체로써 ESG 기술 및 혁신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9. 기후변화 Loss & Damage 주목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 대응 중요성 고조]

-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기후변화로 손실을 입은 개도국을 지원하는 '손실과 피해(Loss & damage)'가 공식 의제로 처음 채택, 기금 조성이 타결됨으로써 기후 재난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됨

- 세계 최대 재보험사인 스위스리는 극단적 기상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의 물적 손해가 수반되어 '05-15년 발생한 손실액의 88%가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액이라고 밝힘
 - '22년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 손실액도 1,150억 달러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손실액(311억 달러)의 3-4배를 웃돌 것으로 전망함
- Climate Vulnerable Forum이 '22.6. 발표한 '기후 취약 경제의 손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9년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변화 취약국의 손실액은 5,250억 달러로, 기후변화 취약국에 사업장을 둔 기업들의 물적 손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됨

[기후 위기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

- S&P글로벌은 S&P글로벌500에 속한 기업의 1/3 이상이 2050년까지 기후 위기로 인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자산에서 20% 이상 가치를 잃게 될 것으로 분석함
 - S&P글로벌은 2만 개 이상의 기업과 87만 개 이상의 자산 위치가 8가지 기후 위험(극한의 열, 극한의 추위, 산불, 물 스트레스, 가뭄, 연안 홍수, 자갈 홍수, 열대저기압)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기후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함
 - 이러한 결과는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을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지구 온도를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하는 파리협정 목표가 달성되면 물리적 위험이 높은 자산을 보유한 대기업은 39%로 낮아질 수 있음
- 여러 신용평가사가 기후변화로 인한 기업의 물리적 리스크를 비용으로 수치화하고 있어 기후 위기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형성될 것으로 보임
 - S&P Global, JPMorgan Chase, Fitch Ratings, Morningstar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업의 물리적 리스크 노출도와 해당 리스크 예방을 위한 미래 재무 비용을 평가한 데이터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10. Next Carbon 이슈 제기

[생물다양성 리스크에 대한 사업적 대응과 적응 요구]

□ 세계자연기금(WWF), 세계지속가능발전협의회(WBCSD) 등 7개 기관이 협력하여 발간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핸드북(’22.12.9.)’은 네 가지 방안을 통해 생물다양성 리스크 관련 사업적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함

- (가치 제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공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제안 가치와 브랜드 개선
- (혁신 주도 시장) 가치 있는 제품/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수익성 있는 신규 마켓 진입
- (비용 효율화) 운영 효율성 강화, 원자재 및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한 공급자와의 협력 강화,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한 ESG 성과 개선
- (사업 매력도 증진) 생물다양성 중심의 기업 노력과 인재 유지 및 확보를 위한 사내 문화 개발

□ 생물다양성 관련 글로벌 공시 표준이 될 자연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협의체(TNFD)*는 LEAP 접근 방식을 제안, 향후 기업의 생물다양성 대응이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 LEAP은 ①기업이 속한 지정학적 맥락과 환경의 특성을 발굴하고(Locate), ②속해 있는 지역 및 환경에 대한 기업의 종속 정도와 영향을 평가하고(Evaluate), ③그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측정하고(Assess), ④전략 구축, 정보 공시 등 자연과 관련된 위기와 기회에 대한 대응을 준비(Prepare)하는 것을 말함

* 생물다양성에 관한 재무 정보 공개 기준 수립을 위해 유엔개발계획(UNDP)과 세계자연기금(WWF) 등의 주도로 '21.6. 공식 출범된 글로벌 협의체

□ TNFD는 현재 3차 베타 버전을 발표한 상태로 '23.2. 4차 베타 버전 발표 후, '23.9.까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ISSB의 글로벌 ESG 공시 표준안으로 편입될 예정임

[Water Risk 관련 통합적 정보 관리 및 성과 개선 요구]

- '22년 여름, 유럽은 EU 영토의 약 60%가 가뭄을 겪었고 주요 강들의 수위가 바지선 운항 마지노선까지 내려가면서 에너지/물류 비용 상승, 생산 시설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함
- 이에, 세레스(Ceres)는 '물의 가치화를 위한 금융 이니셔티브(VWFI)'를 '22.8. 출범시키고, 물 집약도가 높은 72개 기업에 물 관리를 촉구하고 있음
 - VWFI는 운용 자산 규모가 약 9조8000억 달러에 달하는 지속가능성 투자자 연합임
 - VWFI는 기업의 수자원 관리 수준과 상관없이 비즈니스의 수자원 의존도와 물 소비와 밸류체인에 있어서의 기업 영향력을 기준으로 대상 기업을 선정함
- VWFI는 수자원과 관련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의 통합적 정보(물 사용량, 수질, 생태계 보호, 물/위생 접근성, 이사회 감독, 공공정책 참여), 자사와 밸류체인 차원에서의 성과, 연도별 개선 성과를 요구함

11. 'Social'의 중요성 부상

[책임 투자, 환경에서 사회 영역으로 확장 전망]

-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은 220개의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소셜 이슈 스튜어드십 이니셔티브인 '어드밴스(Advance)'를 '22.12.1. 발족시킴
 - 어드밴스는 Climate Action100+(CA100+)*의 모델을 인권 프로그램에 적용한 것으로, 인권침해와 사회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함
 - 참여 기업들에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 이행', '기업의 정치적 참여와 인권 존중에 대한 책임 연계', '운영 및 밸류체인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 이슈에 대한 상당한 개선'을 요구할 것임

* 고탄소 배출 글로벌 대기업 대상 기후변화 대응 액션을 촉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자 이니셔티브

□ 어드밴스는 금속/광업, 재생에너지 섹터에 해당하는 40개 Focus Company를 시작으로 대상 섹터 및 기업을 확대할 계획임

○ 금속/광업 부문으로 POSCO, ArcelorMittal(룩셈부르크), BHP(호주) 등 25개사, 재생에너지 부문으로 Orsted(덴마크), E.ON(독일), Siemens Gamesa(스페인) 등 15개사가 참여함

□ PRI는 자체적인 인권 정책 및 실사 프로세스를 1년 내 준비하여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명시된 목표에 대한 이니셔티브의 진행 상황을 매년 보고서를 통해 업데이트 및 공유할 예정임

[중대 재해 감축, '사후 규제와 처벌'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

□ 우리나라 정부는 '26년까지 산재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1만명당 비율)로 감축하는 내용의 '중대 재해 감축 로드맵'을 '22.11.30. 발표함

○ 우리나라 '21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828명(0.43%)으로 OECD 38개국 중 34위임

○ '2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통해 사후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지만 산재 사고 사망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처벌에서 예방으로 접근법을 전환하게 됨

* 임근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

□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23년부터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평가 및 예방을 위한 조직, 프로세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중대 재해 발생 시 위험성 평가가 미흡한 기업은 엄중 처벌하는 반면, 충실히 수행한 기업은 구형·양형 판결 시 노력 사항을 고려할 계획임

[여성 리더십 육성 및 확보 필요성 부각]

- EU의회는 직원 수 250명 이상 EU 내 상장사는 '26년부터 의무적으로 비상임이사의 40% 또는 상임이사의 33%를 여성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이사회 내 여성 비율 지침(Women on Boards Directive)'을 '22.11.21. 통과시킴
 - EU 회원국들은 지침 미준수 기업 대상 벌금 부과와 같은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사법기관은 지침 위반 기업이 선택한 이사회를 무효화할 수 있음
- 국내의 경우, '20.8.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여성 등기임원 비율이 '20년 3.9%에서 '22년 8.8%로 대폭 상승했으나, 주로 교수나 법조인 출신으로 기업인 출신 여성 리더십 확보는 부족한 상황임

12. 종합 및 시사점

- ESG 논의 영역의 확장과 요구 수준의 심화는 주요 정부, 투자자, 산업계를 통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논의된 것들로 구체적인 윤곽이 '22년에 드러남
 - 그동안 ESG는 투자자, 정부, 산업계 간 상호 니즈를 기반으로 해당 범위를 확장시키고 요구 수준과 구속력을 강화한 바, 이미 이해관계자 생태계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음
- 이슈별 추진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ESG와 비즈니스가 별개가 아닌, 철저히 통합된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는 큰 방향성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ESG 공시 관련 표준화 및 의무화를 통해 기업의 ESG 수준과 비즈니스의 친환경성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것임
 - ESG Washing과 ESG 혁신 사례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ESG의 실질적 성과 창출 및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식에 대한 논의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의 마케팅 및 소통, 비즈니스 모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밸류체인/공급망 관리, 실질적 ESG 성과 창출 요구는 실무진 차원의 임기응변식 대응이 통하지 않는 영역으로 ESG가 새로운 비즈니스 경쟁력으로 부상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기업은 ESG의 변곡점인 2023년의 변화에 신속하게 준비하고 대응함으로써 ESG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고객/금융 생태계 재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임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보고서/규제안]

Business Handbook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Summary 2022, '22.12.9., CEEC

Climate Vulnerable Economies Loss Report, '22.6., Climate Vulnerable Forum

Sigma 01/2016: Natural catastrophes and man-made disasters in 2015: Asia suffers substantial losses, '16.3.31., Swiss Re Institute

Annual Plan 2023/24 consultation, '22.12.15., CMA

CMA guidance on environmental claims on goods and services, '21.9.20., CMA

유가증권 상장회사 ESG위원회 현황, '22.10.28., 경제개혁연구소

ESG 위원회 안건 분석 및 시사점, '22.9.20., 전국경제인연합회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초안, '22.3.31., IFRS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초안, '22.3.31., IFRS

EU집행위, 기업 공급망 실사법안 초안 공개, '22.03.28., KOTRA 해외시장뉴스

EU공급망실사지침(안) 주요 내용과 기업 사례, '22.05.11., 한국무역협회

European Commission, '21.07.06.,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2021/2178

2021 Year in Review: A Progress Update, '22.01., Climate Action 100+

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2021, '22.01., RE100

2022 Status Report, '22.10., TCFD

Does ESG really matter-and why?, '22.08.10., McKinsey Quarterly

[세미나]

세계자연기금(WWF) 발표자료, '22.11.10., ESG친환경대전

맥킨지코리아 발표자료, '22.11.10., ESG친환경대전

제12차 대한상의 ESG경영 온라인 포럼, '22.12.6., 대한상공회의소

ESG 분쟁의 양상 및 리스크 관리, '22.11.7., 대한상의-김&장 공동 세미나

[기사/미디어]

UN PRI, 'S(사회)' 강조한 이니셔티브 '어드밴스' 출범, '22.12.6., 임팩트온

EU 대기업 2026년부터 비상임이사 40% 여성 할당, '22.11.23., ESG경제

상장사 17% 여성 사외이사 '0'명...인재풀 모자라 외국인까지 물색", '22.7.11., 중앙일보

자본시장법 개정 후 여성 사외이사만 증가...여성 사내이사는 정체, '22.10.25., 한경산업

"라인강마저"...유럽 '500년 만의 최악의 가뭄', '22.8.14., SBS뉴스

세계 곳곳서 지진·태풍·홍수, 올해 자연재해 손실액이 무려..., '22.12.8., 조선일보

대기업 98%, 물리적 리스크 노출된다...포스코도 침수 피해로 리스크 성큼, '22.9.19., 임팩트온

Circular Economy: Commission proposes new consumer rights and a ban on greenwashing, '22.3.30., European Commission

그린워싱 규제화 동향 및 관련 기업 사례, '22.8.12., 법률신문뉴스

[ESG칼럼] 디커플링, 새해 ESG성과 기준, '22.1.2., 전자신문

서스틴베스트 "ESG위원회 설치 늘었지만 활동은 미흡", '22.6.16., 연합뉴스

벤처투자, 지난 30년보다 낙관적인 미래 30년, '22.3.7., 벤처스퀘어

Blackrock CEO Larry Fink: the next 1,000 billion-dollar start-ups will be in climate tech, '21.10.25., CNBC

Solugen raises cash to build green chemical factories, '22.11.2., Chemical & Engineering News

Green Deal: EU agrees new law on more sustainable and circular batteries to support EU's energy transition and competitive industry, '22.12.9., EC

Green Deal: New proposals to make sustainable products the norm and boost Europe's resource independence, '22.3.30., EC

금감원, 금융권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스템 개발키로, '22.12.20., 연합뉴스

'차별 집단 소송'의 최근 해외 사례 및 시사점, '22.10.13., 노동법률

메타 소액주주 소송, 본격적인 ESG 법적 분쟁의 서막, '22.12.14., 법률신문 오피니언

Global coal demand is set to return to its all-time high in 2022, '22.7.28., IEA

ESG should be boiled down to one simple measure: emissions - Three letters that won't save the planet, '22.07.23., The Economist

[홈페이지]

UN PRI - Advance 홈페이지(unpri.org/investment-tools/stewardship/advance)

Ceres 홈페이지(ceres.org/water)

TNFD 홈페이지(tnfd.global)

GRI 홈페이지(globalreporting.org/standards/sector-program)